

화재에 멈추고 해킹에 털리고... 정부전산망, 또 드러난 관리 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망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해킹 정황 인지 후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 밝혔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등 정확한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 유출된 인증서의 경우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안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갖고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 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프랙 보고서에는 온나라시스템 접속 로그와 공무원들이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파일, 이를 이용하는 기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토페이스(API) 소스코드 등이 해킹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도 해커들이 원격접속시스템을 이용하는 재택근무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뒤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인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해킹 정황 인지 후 지난 7월 28일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8월 4일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접속 시 GPKI 인증서와 함께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또 인증서 API 소스코드는 액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보안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GPKI 인증서의 경우 이미 공무원 650명 가량의 공인 인증서 파일이 탈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2명의 경우는 인증서 키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지난 7월 외부 PC에서 접근한 정황을 확인, 유출 경위와 피해 영향도 등을 조사중이며 보안 강화를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행안부 "지난 7월 외부 PC서 '온나라' 접근 정황 확인" 8월 美보안매체 '프랙' 해킹보도 두달 만에 사실 인정 "공무원 650명 인증서 파일 탈취... 3명은 악용 가능성" 배후 등 정확한 경위 몰라... '3년 감감' 논란

이에 대해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보혁신실장은 브리핑에서 "650명의 인증서 파일 중 대부분은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며 "3명은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 8월 13일 폐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폐기 조치 전 유효 기간이 남아있던 이들 3명의 인증서가 악용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실장은 "비정상 접근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증서 자체만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비밀번호와 함께 노출됐을 때는 악용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번 해킹이 누구의 소행이고, 어떻게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으며,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은 "프랙은 해킹 배후로 북한 김

수키 조직을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킹 소행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용자 부주의' 정도라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실장은 "이 부분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GPKI 인증서는 가정 등에서 원격근무를 할 때 쓴다. 사용자는 6만3800명 정도"라며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때 인증서 정보 탈취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누락 발표'도 논란이다. 이미 지난 7월 중순께 해킹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세 달이 지나야 관련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는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두

달간 침묵을 유지해왔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떤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추가적인 조사나 분석을 진행한다"며 "단순히 해킹 사실만 발표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뿐 아니라 이미 2022년 9월부터 해커들이 인증서와 IP로 정부 행정망에 접속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지만, 3년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생체기반 복합인증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 보다 안전한 인증체계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 물리적 IC 카드나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휴대하기 때문에 PC 등 다른 매체에 저장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로 시스템 백업과 이중화 미비가 못매를 맞은 가운데, 공무원 업무망 보안까지 뚫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 부실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與, 장동혁 尹 면회에 "또 계엄하러나"

정청래 "단단히 무장하고 있더니 또 계엄하려고 하나" "장동혁,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정당해산 심판 다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반성 없는 내란 미화정치"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여거인 또 계엄하러나'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단단히 무장하고 있더니 또 계엄하러나"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윤 전 대통령)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도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썼다.

정 대표는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재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구금 국민 구출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와중에 내란 수괴 면회 다녀온 장 대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의 낭부해(낭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다. 뻔뻔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참회의 기도 뿐이다. 윤석열과 장 대표가 되새겨야 할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린다"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란 성경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다"라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투쟁이 아닌 참회로, 기억 왜곡이 아닌 진실 규명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은 '누가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과 극우세력의 복귀를 꿈꾸는 정치세는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스스로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일반 면회로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 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동석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통령, '여순사건' 발생 77주기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발생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뉴스시스

이어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우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때아닌 가을장마에 깨씨무늬병까지... 쌀값 비상인데 정부 대책은 빈손

산지 쌀값 작년보다 약 30% 올라... 이달 안정 전망 가을장마로 햅쌀 출하 시기 늦어지고 병해 확산 "모니터링 필요" 지적... 농가 눈치에 논의는 소극적

예상치 못한 가을장마와 병해 확산이 겹치며 쌀값 안정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부는 올해 햅쌀 출하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례적인 잦은 가을비와 '깨씨무늬병'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20kg 기준 쌀 소

매가격은 6만607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상승했다. 산지쌀값은 5일 기준 20kg당 6만1988원으로 작년보다 약 30% 올랐다.

정부는 수확기 대책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줄이고 할인행사 폭과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햅쌀 출하가 시작되면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을장마로 인해 햅쌀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깨씨무늬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쌀값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

터가 9월 중순 실시한 조사에서 잦은 강우를 계기로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해 발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REI 측은 "단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상 여건과 병해 변수에 따라 생산량은 355만~360만 수준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9월 잦은 비로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도열

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치권도 쌀값 논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시기에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모두 쌀값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농가 민심을 의식한 탓에 쌀값 상승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쌀값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지역구 농민들의 영향력이 센데 쌀값이 높다는 식의 발언 자체도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이뤄졌던 시장격리가 쌀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뉴스시스

민주, 여순사건 77주기 맞아 "명예회복 앞장"

"다수 민간인 희생돼...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

권협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여수·순천 사건 77주기를 맞아 "민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 19일은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8년 10월 19일,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당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비상계엄 1호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공권력을 투입했고,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2021년 7월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2022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진상규명에 있어 뚜렷한 결과가 없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해 7월까지 7546건이 넘는 유족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된 건은 9.4%(708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진상규명기확단'은 '반란'이란 표현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4년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책임지는 자세로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스시스

해양치유원도
2025 완도 방문의 해

완도 앞선 치유됐선

2025 청정완도 가을싱어행

2025. 10. 24. (목) - 10. 26. (일)
완도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개막축하쇼

10월 24일(목) 17시~19시

김희재

린

황치열

상설 프로그램

- 문화의 시간: 2026 Pre 완도국제제철류 박람회 홍보관, 완도해양치유 홍보관
- 완도호랑이시 동화 속 여행 체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 관학수시대 치과병원 부티샵
- 완도호랑이시 동화 속 여행 체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주요의 진행분야

- 목매지기 및 고니 안뜰기
- 완도수목원 그린리노베이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 완도의 가을: 완도의 가을 포토체험

권역별 프로그램

- 완도 권역: 완도수목원 그린리노베이션
- 순천 권역: 제2회 맨발걷기 페스티벌
- 영광 권역: 완하수·황이, 뽕송이 불꽃놀이 신촌리 맨발 걷기
- 생원 권역: 완도호랑이시 동화 속 여행 체험

할인 EVENT!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인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 ~ 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위 치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28,000원	80,000원	125,000원	1:1 90,000원
소년	26,000원	22,000원			2:1 70,000원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